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제3367호
-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안 건: 2026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 제출일자: 2025. 10. 31.
- 회부일자: 2025. 11. 4.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

II.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3,366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3,441억 5천9백만원) 대비 74억 7천3백만원($\Delta 2.2\%$)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36,686	344,159	$\Delta 7,473$	$\Delta 2.2$
일반회계	330,056	343,192	$\Delta 13,136$	$\Delta 3.8$
균형발전특별회계	6,630	967	5,663	585.6

※ 2025년 최종예산 기준

나.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779억 7천만원으로 전년(5,880억 8천9백만원) 대비 101억 1천9백만원($\Delta 1.7\%$)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times 153,382$) 577,970	($\times 128,101$) 588,089	($\times 25,281$) $\Delta 10,119$	$\Delta 1.7$
일반회계	($\times 146,898$) 561,437	($\times 127,135$) 561,556	($\times 19,763$) $\Delta 119$	$\Delta 0.02$
도시개발특별회계	6,624	24,627	$\Delta 18,003$	$\Delta 73.1$
균형발전특별회계	($\times 6,484$) 9,909	($\times 966$) 1,906	($\times 5,518$) 8,003	419.9

※ 2025년 최종예산 기준

2.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300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131억 3천6백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일반회계)	330,056	343,192	△13,136	△3.8
세외수입	163,581	141,779	21,802	15.4
경상적세외수입	154,302	131,715	22,587	17.1
재산임대수입	1,356	1,290	66	5.1
사용료 수입	-	4	△4	△100.0
사업수입	138,081	118,479	19,602	16.5
징수교부금수입	13,801	11,334	2,467	21.8
이자수입	1,064	608	456	75.0
임시적세외수입	8,180	8,568	△388	△4.5
보조금반환수입	6,189	6,216	△27	△0.4
기타수입	1,991	2,351	△361	△1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8	179	△51	△28.5
과징금	25	22	3	13.6
과태료	103	157	△54	△34.4
지난연도수입	971	1,318	△347	△26.3
보조금(국고보조금등)	146,898	127,135	19,763	1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78	74,279	△54,701	△73.6
보전수입등	19,578	74,279	△54,701	△73.6
전년도이월금	19,115	72,736	△53,622	△73.7
보조금등반환금	463	1,542	△1,079	△7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1,635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218억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수입: 1,543억 2백만원(전년 대비 증 225억 8천7백만원)

• 재 산 임 대 수 입	13억 5천6백만원 (증 6천6백만원)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13억 5천6백만원
-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8억 3천3백만원
- CNG충전소 임대료	4천만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8천4백만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이용료	2천3백만원
- 강남자원회수시설 임대료(탄천하수열배관)	5천7백만원
- 노원자원회수시설 송전선로 선하지 임대료	1천6백만원
- 마포자원회수시설 임대료	1천7백만원
- 강남주민편익시설 임대료(태양광발전)	0.3백만원
- 마포구 청소차 차고지 사용료	0.3백만원
- 성동자동차검사소 외 3개소 임대료	2억 8천6백만원
• 사 용 료 수 입	0원 (감 4백만원)
• 사 업 수 입	1,380억 8천1백만원 (증 196억 2백만원)
· 기 타 사 업 수 입	1,380억 8천1백만원
- 시소유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수입	29억 4천7백만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수입	2억1백만원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수입	29억 3천1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1,294억 7백만원
- 차량정비센터 운영수입	25억 9천6백만원
• 징 수 교 부 금 수 입	138억 1백만원 (증 24억 6천7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1천만원
-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백만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12억 9천만원
• 이 자 수 입	10억 6천4백만원 (증 4억 5천6백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2백만원
-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10억 6천2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8천만원(전년 대비 감 3억 8천8백만원)

- 보조금 반환 수입 61억 8천9백만원 (감 2천7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억 6천만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 1천8백만원
 - 위탁비반환수입 30억 1천2백만원
- 기 타 수 입 19억 9천1백만원 (감 3억 6천1백만원)
 - 그 외 수 입 19억 9천1백만원
 - 기타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퇴직직원의 선지급 복리후생비 반납분 등) 5억 1천7백만원
 - 반납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대금 11억 5천4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소각고철 등 매각대금 3억 1천4백만원
 - 입주업체공과금 및 기타수입 6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2천8백만원(전년 대비 감 5천1백만원)

- 과 징 금 2천5백만원 (증 3백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천5백만원
- 과 태 료 1억 3백만원 (감 5천4백만원)
 - 기 타 과 태 료 1억 3백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백만원
 - 전기, 전력 관련법 위반 과태료 3천8백만원
 - 환경영향평가 조례위반 과태료 2천8백만원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위반 과태료 5백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 0.3백만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2천4백만원
 -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과태료 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 9억 7천1백만원(전년 대비 감 3억 4천7백만원)

- 지 난 연 도 수 입 9억 7천1백만원
 -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등 3천9백만원
 - 과태료 등 체납금 5억 8백만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 3억원
 - 차량정비비 미납금 1억 2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은 1,46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97억 6천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1,468억 9천8백만원(전년대비 증 197억 6천3백만원)

• 국 고 보 조 금	1,428억 2천4백만원 (증 229억 6천6백만원)
-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 강화	1억 5천만원
- 전기차 보급	1,052억 7천만원
- 수소차 보급	166억 8천5백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천만원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억 7천6백만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176억 5천9백만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보증기간 경과장치	14억 4천8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설치	5억원
-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8억원
-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1억 1천6백만원
• 기 금	40억 7천3백만원 (감 32억 3백만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6천만원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3억원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지원	4억 7천5백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7억원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21억 3천 8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5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전수입등: 195억 7천8백만원(전년 대비 감 547억 1백만원)

• 전 년 도 이 월 금	191억 1천5백만원 (감 536억 2천2백만원)
• 보 조 금 등 반 환 금	4억 6천3백만원 (감 10억 7천9백만원)

2) 균형발전특별회계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6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85.6%인 56억 6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균형발전특별회계)	6,630	967	5,663	585.6
세외수입	93	-	93	
경상적세외수입	7	-	7	
이자수입	7	-	7	
임시적세외수입	86	-	86	
보조금반환수입	86	-	86	
보조금(국고보조금등)	6,484	966	5,518	57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	1	52	
보전수입등	53	1	52	
전년도이월금	53	1	52	

- 균형발전특별회계 66억 3천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수입: 7백만원(전년 대비 증 7백만원)

- 이 자 수 입 7백만원 (증 7백만원)
 -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7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8천6백만원(전년 대비 증 8천 6백만원)

- 보 조 금 반 환 수 입 8천6백만원 (증 8천6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천6백만원

- 보조금 : 64억 8천4백만원(전년 대비 증 55억 1천8백만원)

• 국 고 보 조 금	64억 8천4백만원 (증 55억 1천8백만원)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1억 7백만원
-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6억 8천만원
- 업사이클센터 설치	24억 1천4백만원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32억 1천6백만원 (회계이관)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6천7백만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5천3백만원(전년대비 증 5천2백만원)

• 전 년 도 이 월 금	5천3백만원 (증 5천 2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천3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779억 7천만원으로 전년 (5,880억 8천9백만원) 대비 101억 1천9백만원(△1.7%)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4,602억 6천5백만원(79.6%), 행정운영경비 10억 4천만원(0.2%), 재무활동비 1,166억 6천4백만원(20.2%)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77,970	588,089	△10,119	△1.7
사 업 비	460,265	496,197	△35,931	△7.2
행정운영경비	1,040	1,124	△84	△7.5
재무활동비	116,664	90,768	25,896	28.5

※ 2025년 최종예산 기준

-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SR센터 현대화”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 총 3건, 446억 9천6백만원임.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및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81,116	44,69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5,590	88	인증제 추가 공모 진행 및 충전기에 대한 인증평가(~'26.6.) 후 운영비 지원 예정으로 이월 추진
SR센터 현대화	754	344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26.6.)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비 등 지출 필요하여 이월 추진
자원회수시설 설치	54,772	44,265	입지결정취소 소송진행에 따라 사업추진 일시 중단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 추진

2) 부서별 세출예산

-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는 친환경차량과(45.3%), 자원회수 시설과(28.9%) 등이며, 주로 전기차 보급,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및 수소 차 보급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 보급 예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71억 3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자원회수시설과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426억 9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기후환경본부	577,970	588,089	△10,119	△1.7
기후환경정책과	24,147	22,865	1,282	5.6
녹색에너지과	13,874	38,800	△24,926	△64.2
친환경건물과	11,017	13,646	△2,629	△19.3
친환경차량과	261,711	204,572	57,139	27.9
대기정책과	45,100	50,733	△5,633	△11.1
자원순환과	35,068	19,164	15,904	83.0
자원회수시설과	167,103	209,797	△42,693	△20.3
생활환경과	16,309	25,206	△8,898	△35.3
차량정비센터	3,641	3,306	335	10.1

가) 기후환경정책과

-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안은 241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12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83억 9천6백만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18억 2천6백만원),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트)조성 사업(37억 8천9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22억 5천9백만원) 등 4개 사업이 과 예산의 67.4%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기후환경정책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24,147	22,865	1,282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511	1,080	431	
2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8,396	9,793	△1,397	
3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626	651	△24	
4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114	99	15	
5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79	206	△27	
6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	900	-	
7	기후변화 국제협력	98	106	△8	
8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600	600	-	
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826	3,542	△1,715	
10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08	293	15	
11	녹색서울실천사업 운영	300	400	△100	
12	서울에너지플러스 운영	240	240	-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120	120	-	
14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463	463	0.3	
15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원	635	-	635	
16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트)조성 사업	3,789	-	3,789	
17	환경기념일 시민 참여 행사 개최*	70	122	△52	
18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 강화	300	-	300	
19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294	291	3	
20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 운영	830	864	△34	
2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259	2,359	△100	
22	기본경비	279	307	△28	
23	국고보조금 반환	8	5	3	
종료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계획(2026~2040) 수립	-	100	△100	
	서울 기후환경 국제포럼 개최	-	223	△223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	100	△100	

* 환경기념일 시민 참여 행사 개최 =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환경의 날 운영

나) 녹색에너지과

- 녹색에너지과 예산안은 138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인 249억 2천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서울에너지공사 지원”(66억 2천4백만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41억 6천5백만원) 등 2개 사업이 과 예산안의 77.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사업 등이 있음.

〈2026년도 녹색에너지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13,874	38,800	△24,926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4,165	5,110	△945	
2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425	521	△95	
3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1,000	2,000	△1,000	
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65	268	97	
5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6,624	24,627	△18,003	
6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43	43	-	
7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95	80	15	
8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175	331	△156	
9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738	-	738	신규
10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107	120	△13	
11	기본경비	58	57	1	
12	국고보조금 반환	79	3,656	△3,577	
종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	1,988	△1,988	

다) 친환경건물과

- 친환경건물과 예산안은 110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인 26억 2천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26억 5천6백만원) 사업이 과 예산안의 24.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등이 있음.

〈2026년도 친환경건물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11,017	13,646	△2,629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10	10	-	
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509	565	△57	
3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운영	246	264	△18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12	5,987	△4,575	
5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1,050	1,037	13	
6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450	900	△450	
7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2,656	2,442	213	
8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79	88	△9	
9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711	-	711	신규
10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398	399	△1	
11	기본경비	50	51	△0.4	
12	국고보조금 반환	3,447	1,606	1,841	
종료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	50	△50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개선	-	37	△37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	210	△210	균특화계 미편성

라) 친환경차량과

- 친환경차량과 예산안은 2,617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9%인 571억 3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보급”(1,405억 1천3백만원)과 “수소차 보급”(223억원) 사업이 과 예산안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이 있음.

〈2026년도 친환경차량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261,711	204,572	57,139	
1	전기차 보급	140,513	104,358	36,155	
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5,064	25,590	△10,526	
3	수소차 보급	22,300	10,288	12,013	
4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6,323	14,571	△8,248	
5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9	66	△27	
6	천연가스 충전소 이용 지원 유지	724	724	-	
7	기본경비	50	50	△0.6	
8	국고보조금 반환	76,699	48,926	27,773	

마) 대기정책과

- 대기정책과 예산안은 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56억 3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387억 1천5백만원)이 과 예산안의 85.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이 있음.

〈2026년도 대기정책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45,100	50,733	△5,633	
1	초미세먼지 및 오존 감축 정책 협력	182	162	20	
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64	414	△150	
3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146	114	32	
4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255	235	20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변화 해석 연구(2차)	150	150	-	
6	운행경유차 저공해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5,819	32,396	3,423	
7	운행경유차저공해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2,896	1,570	1,326	
8	운행경유차 저공해 운영지원	383	242	141	
9	친환경기동반 운영	25	46	△21	
10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91	91	△0.1	
11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2,154	1,320	834	
12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70	1,370	-	
13	기본경비	77	89	△12	
14	국고보조금 반환	1,287	3,684	△2,397	
종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	8,190	△8,190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	480	△480	
	오존 상세모니터링 및 농도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	180	△180	

바)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350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3.0%인 159억 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선별시설 현대화”(105억 1천1백만원), “다회용기 이용활성화 지원”(58억 8천4백만원) 사업이 46.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및 “SR센터 현대화” 사업 등이 있음.

〈2026년도 자원순환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35,068	19,164	15,904	
1	공공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 효율화	924	825	98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1,657	2,004	△347	
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4,113	3,887	227	
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5,381	5,028	353	
5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10,511	996	9,515	
6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	300	500	△200	
7	SR센터 현대화	3,616	754	2,862	
8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5,884	4,562	1,322	회계 이관
9	업사이클센터 설치	2,414	-	2,414	
10	기본경비	138	159	△21	
11	국고보조금 반환	131	231	△99	
종료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시설 확대	-	150	△150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	69	△69	

사) 자원회수시설과

- 자원회수시설과 예산안은 1,671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9천3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전년 대비 526억 9천만원)한 것에 기인하며, 전체 예산 중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사업 예산(1,120억 4천만원)이 과 예산의 67.0%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은평, 구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및 “자치구(은평, 구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사업 등이 있음.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167,103	209,797	△42,693	
1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112,040	107,198	4,841	
2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558	548	10	
3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455	453	1	
4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시설 개선	1,006	1,027	△21	
5	자원회수시설 설치	2,082	54,772	△52,690	
6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811	1,201	△390	
7	자치구(은평, 구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5,271	4,990	281	
8	자치구(은평, 구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9,819	6,897	2,922	
9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34,885	32,660	2,225	
10	기본경비	51	51	△0.8	
11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127	-	127	신규

아) 생활환경과

- 생활환경과 예산안은 163억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5.3%인 88억 9천8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종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2026년도 생활환경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16,309	25,206	△8,898	
1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329	1,360	△31	
2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2	127	15	
3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1,600	1,500	100	
4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	2,700	-	2,700	
5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	96	84	12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1,354	2,000	△646	
7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 성동) 보조	326	451	△125	
8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2,012	548	1,464	
9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1,192	1,046	146	
10	환경공무원 휴게실 개선 지원	900	900	-	
11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2,110	2,103	8	
12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262	504	△242	
13	줍깅주간 운영	45	50	△5	
14	석면관리	141	56	85	
1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72	298	△27	
16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90	189	1	
17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760	1,025	△264	
18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216	615	△399	
19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207	277	△70	
20	환경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273	90	183	
21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34	206	△72	
22	기본경비	48	53	△5	
종료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	875	△875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음식물처리시설 설치)	-	5,613	△5,613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	4,828	△4,828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	300	△300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 조사	-	108	△108	

자) 차량정비센터

- 차량정비센터 예산안은 36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3억 3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이 33억 5천3백만원(2건), 기본경비가 2억 8천9백만원임.

〈2026년도 차량정비센터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3,641	3,306	335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093	2,118	△25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260	881	379	
기본경비	289	308	△19	

3) 성인지 예산¹⁾ 현황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총 2건, 31억 9천6백만원임.

〈2026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3,196	3,776	△58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826	1,792	35	기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70	1,370	-	기타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2025년도 제외)	-	615	△615	-

1)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4) 신규사업 현황

-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4건, 23억 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과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원” 및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 강화”(9억 3천5백만원)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임.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비 고
소 계	2,383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원	635	국고보조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 강화	300	국고보조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738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711	

5) 명시이월 사업 현황

-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SR센터 현대화”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총 3건, 446억 9천6백만원(전액시비)임.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소 계	81,116	44,696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5,590	88	인증제 추가 공모 진행 및 충전기에 대한 인증 평가(~'26.6.) 후 운영비 지원 예정으로 이월 추진
SR센터 현대화	754	344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26.6.)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비 등 지출 필요하여 이월 추진
자원회수시설 설치	54,772	44,265	입지결정취소 소송에 따라 사업추진 일시 중단 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 추진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명시이월은 인증제 추가 공모 진행을 위한 것이고, “SR센터 현대화”는 설계 진행 중으로(~'26.6.) 준공 후 공사비 지출이 필요하며,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입지결정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사업추진 일시 중단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의 내용 및 이월 사유〉

사 업 명	사업 내용 및 이월 사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 대상 충전기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내 민간 개방 급속 충전기 ○ 이월사유: 인증제 추가 공모 진행 및 충전기에 대한 인증 평가 (~'26.6.) 후 운영비 지원 예정
SR센터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SR센터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 개선(장소 이전 건립) (성동구 용답동 250-1외) ○ 시설규모: 5,000톤 → 7,800톤/년(↑2,800톤/년) ○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2층(부지 7,777㎡, 연면적 4,006㎡) ○ 이월사유: 설계용역 진행 중(~'26.6.)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비 지출 예정
자원회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마포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최신 환경기술 도입, 전용 수송로 확보 ○ 시설규모: 1,000톤/일 소각시설 ○ 이월사유: 입지결정취소 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추진 일시 중단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 추진

Ⅲ. 검 토 의 건

1. 예산 규모

- 기후환경본부의 연도별 세출예산(최종예산) 규모는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6년도는 전년(5,880억 8천9백만원) 대비 1.7%(101억 1천9백만원) 감소한 5,77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전년 대비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180억 3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526억 9천만원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 외의 다른 사업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간주예산	최종예산
		1회	2회	3회	4회		
2022년	464,463*	2,975	161,381			1,078	629,736
2023년	518,145	185,485				3,046	703,842
2024년	609,385	19,812				8,360	637,557
2025년	584,284	4,142	△4,272			3,935	588,089
2026년	577,970						

추경 사유

- 2022년 (1회) 중대재해 예방
(2회) 친환경차 보급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사업(1억6천만원)이 경제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서 상 본예산과 실제 본예산과 차이 발생
- 2023년 (1회) 친환경차 보급 등
- 2024년 (1회)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 2025년 (1회)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추가경정 편성 등
(2회) 2025년 정부 2회 추경 대응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등

2. 세입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655~850)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366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3,441억 5천9백만원) 대비 2.2%인 74억 7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이월금 감소에 따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예산(B)	증 감(A-B)	
					증감액	비율(%)
합 계			336,686	344,159	△7,473	△2.2
일반회계	소 계		330,056	343,192	△13,136	△3.8
	세외수입	소 계	163,581	141,779	21,802	15.4
		경상적	154,302	131,715	22,587	17.1
		임시적	8,180	8,568	△388	△4.5
	국고보조금등		146,898	127,135	19,763	1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78	74,279	△54,701	△73.6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6,630	967	5,663	585.6
	세외수입		93	-	93	
	국고보조금등		6,484	966	5,518	57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	1	52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15.4%(218억 2백만원)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9천 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1,294억 7백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112억 9천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25억 1천만원)이며, 이 3건이 세외수입의 87.5%를 차지하고 있음.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 폐기물 반입수수료, 특별출연금, 소각열/전력 판매 비용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 단가 인상 및 특별출연금 인상 계획²⁾에 따라 전년(1,110억 7천7백만원) 대비 183억 3천만원 증가하였음.

2) 반입수수료 인상('25년 대비 10,354/톤, 약 10% 인상 예상), 특별출연금 연 2% 상승분 적용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기타 사업수입)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98,460	97,798	105,364	106,511	108,977	119,051	111,077	121,765	129,40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012년 3월 이전 연식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저공해조치(조기 폐차) 등에 따른 경유차 자연 감소 추세를 반영(△10%)하여 전년(26억 2천1백만원) 대비 1억 1천1백만원 감소한 2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³⁾에 따라 폐기물 소각·매립량 증감 여부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의 40%부터 90%⁴⁾까지 기후부로부터 교부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인당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량 감소로 인해 교부율을 90%로 예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29.6% 증가한 11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환경개선·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환경개선부담금	4,605	3,176	3,091	2,937	2,899	2,804	2,621	2,761	2,510
폐기물처분부담금	6,557	5,937	8,137	5,630	7,930	12,636	8,712	11,780	11,290

- 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시 처분량에 비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부담금 부과
 부담금 = 매립·소각량 × 부과요율(매립 kg당 15원, 소각 kg당 10원) × 산정지수
 ※ 소각 시,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이용하거나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감면 가능
-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4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1,46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97억 6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편성 기준 변경에 따른 물량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기후부는 지자체별 전기차 등록 대수(약 1%) 기준에 따른 보급 물량 확대, 국비 총액의 30% 이상 지방비 편성 의무화, 전기 승합(개인) 신규 보급, 내연 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130만원, 국비 100%, 시비 30%)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571.2% 증가한 64억 8천4백만원으로 이는 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기로 함⁵⁾에 따라 2026년도 신규 자율편성 사업으로 ‘자원순환촉진지원·업사이클 센터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일반회계)는 195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3.6%인 547억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이월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5)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5.4.)

3.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779억 7천만원으로 전년(5,880억 8천9백만원) 대비 101억 1천9백만원(△1.7%) 감소하였음.
-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4,602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4,961억 9천7백만원) 대비 7.2%(△359억 3천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166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907억 6천8백만원) 대비 28.5%(258억 9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사업비 감소는 “자원회수시설 설치”(△526억 9천만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180억 3백만원)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105억 2천6백만원) 예산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⁶⁾”과 “보전지출⁷⁾”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증가(235억 4천4백만원)에 기인하고 있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77,970	588,089	△10,119	△1.7
사 업 비	460,265	496,197	△35,931	△7.2
행정운영경비	1,040	1,124	△84	△7.5
재무활동비	116,664	90,768	25,896	28.5

※ 2025년 최종예산 기준

-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면, 친환경차량과(45.3%)와 자원회수시설과(28.9%)가 본부 예산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사업 등 자원순환 사업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6)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7)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즉,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제외한다면 시 자체 핵심 사업이 부족한 실정인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오존 저감 분야 등의 사업 발굴과 다변화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임.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기후환경본부		(×153,382) 577,970	(×128,101) 588,089	(×25,281) △10,119	△1.7
	기후환경정책과 (4.2%)	(×1,385) 24,147	(×1,969) 22,865	(×△584) 1,282	5.6
	녹색에너지과 (2.4%)	(×107) 13,874	(×1,312) 38,800	(×△1,205) △24,926	△64.2
	친환경건물과 (1.9%)	(×2,838) 11,017	(×5,375) 13,646	(×△2,537) △2,629	△19.3
	친환경차량과 (45.3%)	(×121,975) 261,711	(×82,311) 204,572	(×39,664) 57,139	27.9
	대기정책과 (7.8%)	(×19,964) 45,100	(×22,431) 50,733	(×△2,468) △5,633	△11.1
	자원순환과 (6.1%)	(×5,630) 35,068	(×2,240) 19,164	(×3,390) 15,904	83.0
	자원회수시설과 (28.9%)	(×500) 167,103	(×9,691) 209,797	(×△9,191) △42,693	△20.3
	생활환경과 (2.8%)	(×983) 16,309	(×2,772) 25,206	(×△1,789) △8,898	△35.3
	차량정비센터 (0.6%)	3,641	3,306	335	10.1

4.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

가. 기후환경정책과

- 2026년도 기후환경정책과 사업예산은 241억 4천7백만원으로 총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18억 2천6백만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3억 8백만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15억 1천1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기후환경정책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기후변화 대응계획 이행점검	○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시민평가단 운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	114	99	15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센터 운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 에너지절약 .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제로에너지건물, 에너지절감기술 홍보 등 ○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국가/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등	1,826	(×1,200) 3,542	(×△1,200) △1,715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운영	○ 환경정책 시민참여 거버넌스 운영 - 환경정책 총괄 자문 및 심의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심의 - 환경정책 시민 참여 및 실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캠페인, 포럼, 워크숍 등 개최	308	293	15
에코마일리 지제 운영	○ 에코마일리지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 에코마일리지 ‘녹색실천 분야’ 도입 -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511	1,080	431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과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실천 활동 등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2009년 건물 에코마일리지 시행,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 시행에 이어 2022년 12월에는 이를 통합한 마일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은 전년(10억 8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4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녹색실천 마일리지 시행에 맞춰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스템 전산 개발(3억 8천8백만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1억 1천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6년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증 감(A-B)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비율(%)
계	(x-) 1,511	(x-) 1,080	(x-) 1,080	(x-) 431	(x-) 40
사무관리비	90	53	53	37	69
공공운영비	674	627	627	48	8
전산개발비	388	0	0	388	100
포상금	50	50	50	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	250	250	0	0
공기관위탁사업비	0	100	100	△100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59	0	0	59	100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전년(97억 9천3백만원) 대비 14% 감소한 83억 9천6백만원(국비 3억원, 시비 80억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므로 사업 취지와 내용에 이견은 없음.

다만, 동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3.6%로 매우 낮음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⁸⁾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사업에 준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사업 제출 요청(재정담당관, '25.8.7.)
: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

또한, 목적이 유사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과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심사 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에코마일리지 관련 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총 99억 7백만원)			2025년 예산 (총 108억 7천3백만원)		
사 업 명	과목구분	금 액	사 업 명	과목구분	금 액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계	1,51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계	1,080
	사무관리비	90		사무관리비	53
	공공운영비	674		공공운영비	627
	전산개발비	388		전산개발비	0
	포상금	50		포상금	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59		자산및물품취득비	0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계	8,396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계	9,793
	기타보상금	8,396		기타보상금	9,793

-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조성”⁹⁾은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부지면적 7,052㎡, 건축면적 1,956㎡, 연면적 6,783㎡)를 활용하여 환경교육 체험 시설을 구축하고자 기후부-서울시-교육청이 협업('21.8. MOU 체결)하여 에코스쿨 시범사업¹⁰⁾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37억 8천9백만원을 편성¹¹⁾ 하였음.

에코스쿨은 당초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의견 통보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3년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보, 2024년 (교육청)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등을 거쳤으며, 2027년까지 총 227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계획임(기후부 30.8%, 교육부 17.6%, 서울시 20%, 교육청 31.6%).

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기후부 시범사업으로 '23년까지 2개소(서울 공진중, 부산 반여초) 조성, '25년까지 전국 5개소 조성.

11) 총 사업비: 227억원(기후부 30.8%, 교육부 17.6%, 서울시 20%, 교육청 31.6%), 시 부담금(20%) 4,546백만원 중 '26년 3,789백만원, '27년 757백만원 편성.

기후환경본부는 총면적 6,783㎡, 4층 규모의 에코스쿨 공간 중 일부를 서울시 광역환경교육센터 전용 사무실(2·3층 정보관)로, 나머지 공간은 교육청과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142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 에코스쿨 공사비 3,788,806천원 = 3,788,806천원
	증감사유	
	- 에코스쿨 리모델링 공사비 신규 반영('25년 설계 및 석면내진 공사, '26년 리모델링 공사) - 총 사업비: 227억원 (분담비율: 기후부 30.8%, 교육부 17.6%, 서울시 20%, 교육청 31.6%) - 시 분담금: 4,546백만원 중 '26년 3,789백만원, '27년 757백만원 편성	

〈에코 스쿨 공간 구성 개요〉

구 분	시설용도	면적(㎡)		비 고
전 공 용 공 간	서울특별시 광역환경교육센터	990	22.5%	정보관 2, 3층 단독
	전시·휴게	511	11.7%	전시관, 쉼터 등
	학습실, 교육실 등	2,419	55.2%	에코스쿨 공간
	기타공간	466	10.6%	장비 수장고, 가사 준비실 등
	소 계	4,386	100%	
공용공간		2,397		복도, 계단 등
합 계		6,783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 방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사업 추진계획은 2021년과 2022년 상임위 업무 보고¹²⁾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¹³⁾에 대해 상임위와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된 점은 적절하지 않을 것임.

12) 2021년 제303회 임시회 정례회, 2022년 제305회 임시회

13) 2022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 : '22.10. ※ 결과: 재검토
 2023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 : '23.10. ※ 결과: 적정
 (교육청)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 '24.4. ※원안가결
 (교육청) 기본·실시설계 : '24.11.~'25.7.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¹⁴⁾」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치 기구로써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예산은 전년(2억 9천3백만원) 대비 5% 증가한 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사업 내역 중 ‘자치구 환경계획 자문회의’ 비용(1천5백만원)은 자치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의 시장 승인¹⁵⁾ 전에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반드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117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회의수당(기조위 및 분과위, 기타회의) 및 서울의제 21 추진 11개월*6분과*14명*150,000원 = 138,600천원	○ 회의수당(기조위 및 분과위, 기타회의) 및 서울의제 21 추진 11개월*6분과*14명*150,000원 = 138,600천원
	○ 분과사업 추진비 등 5개 분과*22,000,000원 = 110,000천원	○ 분과사업 추진비 등 5개 분과*22,000,000원 = 110,000천원
	○ 전체 워크숍 5,400,000원*1회 = 5,400천원	○ 전체 워크숍 5,400,000원*1회 = 5,400천원
	○ 회의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등 5,000,000원*6회 = 30,000천원	○ 회의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등 5,000,000원*6회 = 30,000천원
	○ 지방의제21 연회비 7,000,000원 = 7,000천원	○ 지방의제21 연회비 7,000,000원 = 7,000천원
		○ 환경계획 자문 회의 15개구*10명*100,000원 = 15,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환경계획 심의자문기구인 녹색위 환경계획 자문 활동 예산 증액		

14) 제2조(기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8. ~ 10. (생략)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2(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녹색에너지과

- 2026년도 녹색에너지과 사업예산은 138억 7천4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41억 6천5백만원)과 “서울에너지공사 지원”(66억 2천4백만원) 및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10억원) 등이 있음.

〈2026년 녹색에너지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유지관리 - 탄천 하수열 관리 이행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컨설팅 - 직영 태양광 유지관리 등 	4,165	5,110	△945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열 의무비율* 이상 설치 시 공사비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 - (금액) 개소당 최대 2.5억원 *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 설치 	1,000	2,000	△1,000
서울에너지 공사 지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열수송관 교체 추진을 위한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5.28km 교체 추진 - 태양광미니발전소 사후관리 	6,624	24,627	△18,003
열·환경플랜트 현대화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양천시설 현대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플랜트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도출 - 제도적 타당성, 경제성, 시설 연계 효율화 등 종합검토를 통한 합리적 추진방향 마련 	738	-	738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는 서울시 공공시설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는 41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사업별설명서 p.170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홍보 등 = 90,000천원 ○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7개소) = 38,000천원 ○ 지열 AS지원센터 운영 55,000,000원 = 55,000천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홍보 등 = 90,000천원 ○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7개소) = 38,000천원 ○ 탄천 하수열 관리이행계획 수립 = 101,000천원 - 적격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90,000,000원 = 90,000천원 - 관리이행계획 검토 11,000,000원 = 11,000천원
	증감사유	
	- 재생열 종합지원센터(AS 지원센터) 조성 완료(감) - 탄천 하수열 사업 기간종료 도래에 따른 관리이행 계획 수립(증)	
전산개발비	○ 재생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60,566,000원 = 360,566천원	
	증감사유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 업무 추진 = 384,600천원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 업무 추진 = 404,600천원
	증감사유	
시설비	- 서울에너지공사 대행 업무 추진(증, 2026년 언론 홍보 예산 반영)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500,000,000원 = 3,500,000천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북부여가 센터) 650,000,000원 = 650,000천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500,000,000원 = 3,500,000천원
	증감사유	
	- 북서울꿈의숲 태양열 설치(단년도사업) 완료(감)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건물) 내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설치 (35억원),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유지관리(4억 5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정책 홍보 등(9천만원) 등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7.3%(집행액 20억 6천만원/예산현액 55억 3천 1백만원)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 사유로 태양광·태양열 설치 공사,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25.12월 준공)를 들고 있는바, 향후 사업별

준공 시점을 고려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보다 균형 있게 집행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5억원이 편성됐음에도 별도의 산출 근거 없이 1식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임.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5.10.1)에 따른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및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 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¹⁶⁾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임.

〈2025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25.10.31.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5,531	2,060	37.3
신재생에너지 보급		4,571	1,574	34.4
	신재생에너지 보급(당해예산)	4,150	1,177	28.4
	강북아리수정수센터(태양광 169kW)	796	81	10.2
	암사아리수정수센터(태양광 401kW)	1,243	619	49.8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태양열 88kW)	650	402	61.8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한성백제박물관 등 5개소)	1,460	76	5.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고이월)	421	397	94.2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아동복지센터)	421	397	94.2
공공 태양광 유지·관리 등		960	486	50.7

※ 집행 부진 사유: 태양광·태양열 설치 공사, 지열 설비 효율개선 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25.12월 준공)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¹⁷⁾에 따라 동일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 사업과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

16) 태양광 보급 실적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확대 보급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 연도별 태양광 보급 현황(‘25.8월 기준)>

(단위: 개소, MW)

구 분	계	‘03.~‘14.	‘15.~‘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소수	152,203	6,414	38,413	44,413	33,743	16,203	8,735	1,190	1,117	1,135	840
용 량	467,647	70,949	79,799	51,862	47,521	55,449	41,130	28,157	32,745	37,286	22,749

1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 사업으로 전년 대비(2억 6천8백만원) 36% 증가한 3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시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등 보조율¹⁸⁾을 적용하여 지원하며, 이에 따라 2023년과 2025년에 각 1건, 2026년에 3건이 선정되었음.

2026년에 선정된 3건은 모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강북구 미아동·번동 일대에 247kW, 금천구 시흥동·독산동 일대에 398kW, 동작구 일원에 209kW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데 반해 서울시의 부진한 태양광 보급 실적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서울시 자체 보급은 물론 자치구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태양광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예산 등〉

구 분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위치	미아동, 번동 일원	시흥동, 독산동 일원	동작구 일원
사업 규모	태양광 56개소 247kw (주택) 44개소 132kw (건물) 12개소 115kw	태양광 72개소 398kw (주택) 65개소 195kw, (건물) 7개소 203kw	태양광 54개소 209kw (주택) 52개소 156kw (건물) 2개소 53kw
소요 예산	합계 443,354천원 (정 부) 165,160천원 (37.3%) (지자체) 177,241천원 (40%) (민 간) 100,953천원 (22.7%)	합계 702,952천원 (정 부) 261,020천원 (37.1%) (지자체) 272,230천원 (38.8%) (민 간) 169,702천원 (24.1%)	합계 381,706천원 (정 부) 142,510천원 (37.3%) (지자체) 158,843천원 (41.6%) (민 간) 80,353천원 (21.1%)
시·구 비율 (6:4)	합계 177,241천원 (시)106,344천원 (구)70,897천원	합계 272,230천원 (시)163,338천원 (구)108,892천원	합계 158,843천원 (시)95,305천원 (구)63,538천원

18)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재정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다. 친환경건물과

- 2026년도 친환경건물과 사업예산은 110억 1천7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4억 1천2백만원)과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7억 1천1백만원)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5억 9백만원) 등이 있음.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건물과 예산이 기후환경본부 예산의 1.9%에 불과한 것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정책 중요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친환경건물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 '26년 10,500개소 추진 예정 - (대상) (신고등급) 7,000개소, (총량제) 3,500개소 - (내용)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을 설정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유도	509	565	△5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6년 총 11개소 추진 예정 - (대상) 경로당 (10개소) 도서관 (1개소) - (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1,412	(x2,637) 5,987	(x△2,637) △4,575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26년 취약계층 39개소 추진 예정 - (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밀집 지역, 취약계층 거주시설 등 - (내용)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폭염 등 기후대응 쉼터 조성 등	(x700) 1,050	(x687) 1,037	(x13) 13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 '26년 민간 주택 750가구 추진 예정 -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거주 민간주택 - (내용) 저효율 노후 창호 단열성 및 기밀성 개선	450	900	△45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¹⁹⁾은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2026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²⁰⁾하면서 2026년도는 전년(59억 8천7백만원) 대비 78% 감소한 13억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231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건물에너지 효율화 홍보 등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조직개편(25.1.)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하여 이관 편성. (25)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하위사업으로 편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 어린이집, 경로당 34개소 그린리모델링 90,576천원*34개소 = 3,079,854천원	○ 경로당, 도서관 11개소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강북구 등 8개 자치구 = 1,311,618천원
	증감사유	
	-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비(설계, 공사비 등): 11개소(경로당 10, 도서관 1) : 2026년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제외되어 2025년도 보다 지원개소수 감소 * '25년도 35개소(어린이집18, 경로당 17) - '25년 6월 국고보조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국비 2,186백만원 교부 * 간주처리 후 자치구 교부(25.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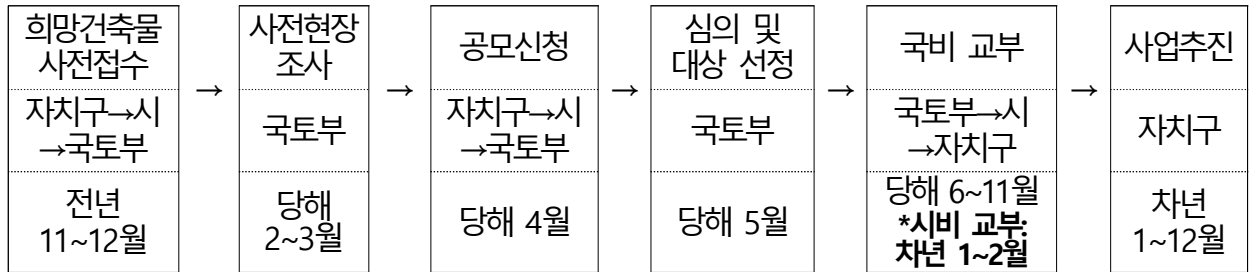
동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선점하고 집행률을 높이하고자 당해 연도 5월경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내시를 통보한 후 7월경에 국비를 교부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부된 국비를 세입·간주 처리한 후 국비는 10월경에, 시비는 차년도 1월경에 교부하고 있음.

즉, 일반적인 국비 지원사업과 달리 국비와 시비의 교부 연도가 불일치하고 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인 1월경에 시비가 교부되는 관계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운용과 사업 집행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바, 기후환경본부는 집행률 제고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동 사업 집행계획을 국비 교부 전부터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20) 2025년 35개소(어린이집 18개소, 경로당 17개소) → 2026년 11개소(경로당 11개소, 도서관 1개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교부 절차〉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친환경건물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반환액 (2023년도) 32억 2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 규모 증가(2022년 87억원, 2023년 132억원)와 함께 6개소의 사업 취소에 따른 것임.

동 사업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당한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특성에 기인하여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정산²¹⁾되고 있으나 이는 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화 하고 공사 지연 또는 시설 이주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²²⁾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후 창호에 덧유리, 방풍재 등을 간편 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전년(9억원) 대비 50% 감소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사업비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2)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7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240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민간경상 사업보조	○ 취약가구 창호 간편시공 보조금 1,500가구*600,000원 = 900,000천원	○ 취약가구 창호 간편시공 보조금 750가구*600,000원 = 450,000천원
	증감사유	
	- 취약계층 대상 간편시공 외 집수리사업을 통한 창호교체 등도 존재하여 지원 가구 규모 축소	

2023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공공주택(SH공사 임대주택) 2,500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지원 대상에 민간 주택을 추가하였고(공공 1,376가구 민간 1,400가구), 2025년에는 민간 주택만 지원하고 있음(민간 1,700가구).

2026년에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새빛주택)과 주택실 사업에도 취약계층 창호 교체 사업이 있어 사업 대상을 750가구로 축소하였으며,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²³⁾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3년에 창의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추경으로 최종 편성된 이래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3건의 타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노후주택 개선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요 내용	사업비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용: 덧유리, 방풍재(틈새바람 차단재) 등 설치 	900 (1,500가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지원 (새빛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주택(세입자 포함) 내용: 창호·조명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지원 ※ 최대 5백만원(공동주택 3백만원) / 70% 이내(저소득층 90% 이내) 	1,500 (550가구)
안심집수리 (주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0년 이상 된 저층, 중위소득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내용: 단열·창호·방수 등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 지원 ※ 최대 10백만원(옥탑 6백만원) / 50% 이내(저소득층 80% 이내) 	7,326 (900가구)
희망의집수리 (주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용: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등 18개 이내 공중 무료 시공 ※ 최대 2.5백만원 	2,500 (1,000가구)

23) 2024년 15억원 → 2025년 9억원 → 2026년 4억 5천만원

라. 친환경차량과

- 2026년도 친환경차량과 사업예산은 2,617억 1천1백만원으로 본부 총예산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1,405억 1천3백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150억 6천4백만원), “수소차 보급”(223억원) 및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63억 2천3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친환경차량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전기차 보급	○ '26년 23,951대 보급 - 시민 생활 밀접한 대중교통(택시, 버스 등) 집중보급하여 전기차 전환 촉진 - 규모 : 민간 23,834대, 공공 117대 보급	(×105,270) 140,513	(×67,130) 104,358	(×38,140) 36,155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26년 393기 구축 - 노후 충전기 재정비, 충전 수요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급속 및 완속 충전기 보급 추진 - 전기차 충전기 AI 화재 감시 시스템 신규 편성 (6.5억원) - 규모 : 민간보조 358기, 공공 35기 보급	15,064	25,590	△10,526
수소차 보급	○ '26 328대 보급 -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 추진 - 규모 : 민간 328대, 수소버스 스택 8개	(×16,685) 22,300	(×8,148) 10,288	(×8,538) 12,013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 '26년 3개소 수소충전소 운영 - 상암 수소스테이션, 양재 수소충전소,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관리	6,323	(×7,000) 14,571	(×△7,000) △8,248

- “전기차 보급”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민간과 공공에 보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전년(1,043억 5천8백만원) 대비 35%(361억 5천5백만원) 증가한 1,405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증 감(A-B)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비율(%)
금 액	(×105,270) 140,513	(×67,735) 105,136	(×67,130) 104,358	(×38,140) 36,155	(×57) 35

※ 2026년 “전기차 보급” 국비 가내시액: 1,335억 1천3백만원

전기차 보급 물량 규모는 승용 17,075대, 택시 1,200대, 버스²⁴⁾ 64대, 화물 1,779대, 이륜 3,803대 등 총 23,951대분으로 전년(9,276대) 대비 158.2%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전기차 수요 정체에서 회복세로 접어드는 점²⁵⁾과 함께 기후부의 전기차 보급 기조가 물량 확대로 변경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2025년 전기차 보급 실적 및 2026년 보급 목표〉 (단위: 대, 백만원)

연 도	구 분	전기차						
		소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전환지원금
2026년	목 표	23,951	17,075	1,200	94	1,779	3,803	-
	예산편성	140,399	67,883	13,260	10,446	23,233	6,121	19,456
2025년	당초 목표	9,975	5,273 (52.9%)	1,237 (12.4%)	460 (4.6%)	827 (8.3%)	2,178 (21.8%)	-
	예산현액	113,744	24,492	11,508	61,599	11,951	4,194	-
	변경 목표(B)	19,882	12,388 (62.3%)	1,437 (7.2%)	399 (2.0%)	1,280 (6.4%)	4,378 (22.0%)	-
	예산현액	133,069	40,569	14,483	50,820	16,715	10,482	-
	실적 ^(10.31. 기준)	14,378	10,129	1,203	152	965	1,929	-
	전망 (~12월)	대(B)	18,638	12,180	1,430	374	1,254	3,400
		B/A(%)	93.7	98.3	99.5	93.7	98.0	77.7

※ 2025년 당초 목표와 예산현액은 본예산에 이월 포함

보조금 편성 기준 주요 변경 사항은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1% 배정²⁶⁾, 차종별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의 30% 이상 편성²⁷⁾, 전환지원금²⁸⁾ 신설임.

물량 확대 기조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편성단가 설정 시 차량 가격 정보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을 고려 하지 않은 채,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보급 물량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2026년 버스(개인) 64대, 버스(통학) 30대 / 2025년: 버스(시내/마을, 통근) 390대, 버스(통학) 10대
 25) 올해 전기차 시장 48.4% 성장…뚜렷한 회복세(에너지신문, '25.9.8.)
 26) 2026년 환경부 가내시 물량 : 서울시 차량등록 대수 330만대의 약 1%인 31,655대 배정
 27) 2026년 환경부 가내시 예산 : 국비 1,335억원, 시비 422억원(31.6%) 편성 요구
 28)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중고 매매 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 대당 1.3백만원

2025년도 전기 승용차의 경우, 당초 보급 목표는 5,273대(244억 9천2백만원)였으나 실제 보급(예정)은 12,180대(405억 6천9백만원)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액 대비 물량으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계획 단가는 대당 464만원이었으나 실제 단가는 333만원으로 28% 낮게 지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은 2023년부터 시작됐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보급 목표 물량을 적게 편성해 온 것은 과거 보급량 자료를 분석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6년도 역시 전년도와 유사하게 설정하였음.

결론적으로 보급 목표 수량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정확하다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산편성 규모가 적절하다면 보급 목표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최근 5년간 서울시 전기차 승용 보조금 단가(최대치) 현황〉 (단위: 만원/대)

연 도	합 계	국 비	시 비
2021년	1,200	800	400
2022년	900	700	200
2023년	860	680	180
2024년	800	650	150
2025년	630	580	50
2026년 ²⁹⁾	390	300	90 ³⁰⁾

〈2025년 서울시 전기차 승용 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만원/대)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승 용	중·대형	최대 630	580	50
	소 형	최대 575	530	45
	초소형	225	200	25

※ 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29) 차종별 보조금 단가 국비의 최소 30% 이상 편성
30) 사업별 설명서 단가로, 2026년 환경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

〈전기차 승용 가격 현황〉

(단위: 만원/대)

연 번	모델명	가 격
1	기아 2026 레이 EV	2,795~3,035
2	기아 2026 EV5	4,885~5,340
3	기아 2026 EV6	4,660~6,247
4	현대 2026 캐스퍼 일렉트릭	2,787~3,337
5	현대 2026 아이오닉5 N	7,490~7,740
6	현대 2026 아이오닉6 N	7,990
7	2025 테슬라 모델 Y	5,299~6,314
8	2025 테슬라 모델 S	12,500~13,800
9	2025 테슬라 모델 X	13,500~15,000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목표 및 실적〉

(단위: 대)

연 도	구 분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2025년 (10.31.기준)	목 표	19,882	12,388	1,437	399	1,280	4,378
	실 적	14,378	10,129	1,203	152	965	1,929
	접 수	16,891	11,298	1,294	394	1,273	2,632
2024년	목 표	18,233	10,372	1,864	855	2,090	3,052
	실 적	13,569	8,328	1,192	707	812	2,530
2023년	목 표	21,815	11,753	3,000	805	4,000	2,257
	실 적	14,637	7,761	2,119	374	2,269	2,114
2022년	목 표	28,060	15,815	3,000	792	2,917	5,536
	실 적	23,281	13,955	2,870	591	2,734	3,131
2021년	목 표	22,980	14,370	630	412	2,600	4,968
	실 적	21,398	13,589	601	167	2,436	4,605

-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수소 승용차,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보급(223억원)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63억 2천3백만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248억 5천9백만원) 15% 증가한 286억 2천3백만원(국비 166억 8천5백만원, 시비 5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증 감(A-B)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비율(%)
수소차 보급	(×16,685) 22,300	(×6,509) 8,675	(×8,148) 10,288	(×8,538) 12,013	(×105) 117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 6,323	(×7,000) 14,571	(×7,000) 14,571	(×7,000) △8,248	(×△100) △57

2025년도 수소 승용차와 버스 보급 목표는 276대(승용 244대, 버스 29대)이고 연말까지 94%인 258대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보급 목표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328대(승용 290대, 버스 38대)로 설정하였음.

당초 2025년도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는 161대였으나,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후속 모델 출시³¹⁾ 등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로 인해 승용차 84대를 추가 보급³²⁾하기로 하였고 추가 예산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변경 사용하여 확보하였음.

예산변경을 통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활용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후속 모델 출시는 서울시와 자동차 업계와의 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보조금 편성 규모를 설정할 때는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6년도 공공부문 수소차 보급 물량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수소차 도입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수소차 보급 목표 및 추진 실적〉

(단위: 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말	12월 말*
목표	승용	2,701	523	300	103	244	
	버스	21	44	36	47	32	
	계	2,722	567	336	150	276	
실적	승용	2,368	521	263	101	229	244
	버스	4	19	33	24	25	29
	계	2,372	540	296	125	254	273
달성률(%)		87.1	95.2	88.1	83.3	92.0	98.3

※ 2026년도 수소차 보급목표 328대(승용 290대, 버스 등 38대)

-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전년(145억 7천1백만원) 대비 57% 감소한 63억 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상암·양재·서소문) 충전소 운영 예산 외에 신규 구축 예산은 미편성되었음.

31) 완전변신 넥쏘와 새 수소버스, 침체된 수소차 시장 깨운다(월간수소경제, '25.5.7.)

32)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계획(친환경차량과-11177, '25.9.17.)

〈2024년, 2025년 수소충전소 보급 실적 및 2026년 보급 목표〉

(단위: 기)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보급 목표	단년	-	7 ³³⁾	20 ³⁴⁾
	누계	13	20	40

2025년도는 은평공영차고지 1개소에 4기의 수소버스 충전소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자치구와 협의 중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수소버스 충전소는 공공부문에서 4개(송파, 양천, 진관2, 은평) 버스차고지에 14기의 충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고 민간부문에서 기후부 공모사업을 통해 3기(2개소-마곡 에코, 강서 오쇠)의 충전소를 조성 중에 있으나, 연내 준공 예정인 수소 충전소는 민간 충전소인 마곡 에코 충전소 1기뿐임.

나머지 16기의 충전소는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추진 중으로 공공부문에서 송파(4기)는 12월 착공 예정이고 양천(4기)은 계획수립 중이며, 진관2(2기)와 은평(4기)은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진척이 더딘 상황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은 수소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충전소 건설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구 분		충전소 명	대상 차량	운영개시	시설 용량(일)	충전 대수(일)	운영기관	비 고
합 계		9개소(13기)			4,900kg	701대		
공공	市 (기후)	상암(1기)	일반	'20.10.	160kg	40대	서울 에너지공사	-
		양재(2기)	일반	'21.3. '22.9.(증설)	600kg	140대		
		서소문청사(1기)	일반	'22.10.	100kg	25대		
	市 (교통)	강서공영차고지(3기)	버스	'22.6.	2,160kg	86대	한국가스 기술공사	-
민간	현대	국회(2기)	일반	'19.9. '22.11.(증설)	700kg	160대	하이넷	-
		강동상일(1기)	일반	'20.5.	350kg	70대	GS칼텍스	복합충전소 (LPG수소전기)
	기후부 공모	마곡에코(1기)	일반	'22.1.	280kg	60대	(주)에코바이오 홀딩스	증설로 '25.12. 까지 미운영
		E1오곡(1기)	일반	'22.4.	300kg	70대	E1	-
		도봉구 도봉동(1기)	일반	'23.10.	250kg	50대	청화자원	-

33) 송파공영차고지 4기(진행 중), (민간)마곡에코 1기(준공), (민간)강서오쇠 2기(진행 중)

34) 양천·은평·진관2 공영차고지 각 4기,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 유도

마. 대기정책과

- 2026년도 대기정책과 사업예산은 451억원으로 본부 총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358억 1천9백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28억 9천6백만원)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2억 6천4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대기정책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초미세먼지 및 오존 감축 정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정보 공유 및 대시민 행동요령 홍보 -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182	162	2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3,715대 지원 - 4등급 추가 지원 500대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3,000대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620 대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30대 -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8대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저공해화 57대 	(x17,659) 35,819	(x16,198) 32,396	(x1,462) 3,423
운행경유차 저공해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6,335대 지원 - 경과장치 클리닝비용 15,831대 - 재사용장치 클리닝비용 504대 - 그 외 부대비용(반납 운송료, 보관료 등) 지원 	(x1,448) 2,896	(x785) 1,570	(x663) 1,326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10개소 지원 - 소규모 방지시설(IoT측정기기) 설치비용 60% 지원 	(x176) 264	(x218) 414	(x△42) △150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_사업별설명서 p.321~338

-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DPF 부착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년(342억 8백만원) 대비 14% 증가한 390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증 감(A-B)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비율(%)
소 계	(×19,108) 39,098	(×16,983) 34,208	(×16,983) 34,208	(×2,124) 4,890	(×13) 1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7,659) 35,819	(×16,198) 32,396	(×16,198) 32,396	(×1,462) 3,423	(×9) 11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448) 2,896	(×785) 1,570	(×785) 1,570	(×663) 1,326	(×84) 84
운행경유차 저공해 운영지원	(×-) 383	(×-) 242	(×-) 242	(×-) 141	(×-) 58

- 2026년도 사업 규모는 전년(8,742대) 대비 56.8% 증가한 13,715대이고 이중 조기 폐차³⁵⁾가 13,650대(4등급 13,000대, 5등급 620대, 건설기계 3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8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57대를 계획하고 있음.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단가 및 지원 비율〉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단가 (전체)	지원단가 (국비)	국비지원율 (%)
조기 폐차	5등급		1,200	600	50
	4등급		2,500	1,250	
	건설기계		3,500	1,750	
운행차 저공해조치	경유차 DPF		3,300	1,650	
	건설기계 DPF		11,000	5,500	
	건설기계 엔진교체		16,500	8,250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38,000	19,000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전기 굴착기	배터리형 (6톤 미만)	20,000	10,000	

35) 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기본 100% + 신차 50%, 무공해차량 구매 50만원), 3.5톤 이상 최대 440~3,000만원(기본 100%+ 신차 200%, 중고 100%)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기본 50~70% + 30%~신차/중고 30~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3.5톤 이상 최대 720~7,800만원(기본 100%+ 신차 200%, 중고 100%)

기후환경본부는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5.9.29.)를 근거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당시 우리 위원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 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음.

【市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로드맵(안)】								
구 분	'19년	'20년	'25.4. ~ 9월	~ '26.11월	'26.12월	'30년	'35년	'50년
서울 전역		5등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12~3월)	제도마련 (조례 제정)	조기폐차 지원 확대, 대시민 홍보 등 · 지정고시	5등급 상시 제한	4등급 상시 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상시 제한					4등급(경유) 확대 제한	4등급 상시 제한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이에 기후환경본부는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일대, 16.7km²)의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 등록 4등급 경유차('25.7. 기준) 1,002대를 대상으로 차량당 100만원(전액 시비)의 조기 폐차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2026년도는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5억원(50%, 500대)을 편성 하였음.

서울시 4등급 차량등록 대수³⁶⁾ 중 4등급 경유 차량은 66,360대이고 2026년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목표 물량을 전년 대비(7,625대) 대비 70.5% 증가한 13,000대로 설정했으나, 이는 여전히 전체 차량의 19.6%에 불과하고 지원 단가(최대 800만원) 역시 차량가액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사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장기간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운행해 온 시민들 역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이바지한 면이 있는 만큼 운행 제한에 앞서 차량가액

36) 서울시 4등급 차량 등록 대수: 123,331대(4등급 운행 경유차 66,360대)(2025.7. 기준).

4등급 차량 (대)	계 (A+B)	보험 가입 계(A)	보험가입								보험 미가입(B)
			경유			취발유	가스			기타	
			소계	DPF 부착	DPF 미부착		LNG	LPG	CNG		
서울	123,331	74,648	66,360	10,941	55,419	7,864	-	423	-	1	48,683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조기에 저공해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322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4등급 조기 폐차 추가지원 1,000,000원*500대 = 500,000천원
	증감사유	
	- 2026년 녹색교통지역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에 대비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대상 추가지원 신규 편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조기 폐차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3,700,000원*7,625대 = 28,212,500천원	○ 조기 폐차 4등급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2,500,000원*13,000대 = 32,500,000천원
	증감사유	
	- 우리시 실수요 물량 전망과 집행률을 반영한 환경부 '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물량 가내시('25.9.24.)에 따라 4등급 조기폐차 예산 증액	

〈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적 및 2026년 목표〉

(단위:대, 백만원)

연도	구 분		계	조기 폐차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녹색교통 지역 4등급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 설 기계	DPF 부착	화물차 전동화	DPF 부착	엔진 교체	전동화	전기 굴착기	전기 지게차	무공해 건설장 (개소)
2026	예산 편성	물량	13,715(1) 추가 500	추가 500	13,000	620	30	8	-	1	5	30	11	10	(1)
		금액	35,819	500	32,500	744	105	26	-	11	83	1,140	310	100	300
2025	예산 편성	물량	8,742(1)	-	7,625	900	100	46	8	2	33	19	9	-	(1)
		금액	32,396	-	28,212	1,440	373	152	120	22	545	722	510	-	300
	실적 (10월)	물량	6,275	-	5,671	292	260	26	-	1	4	13	8	-	-
		금액	24,963	-	14,607	650	8,784	97	-	8	53	476	288	-	-
	전망 (12월)	물량	8,529	-	7,790	404	265	28	8	1	5	19	9	-	-
		금액	32,084	-	20,174	887	9,532	102	120	8	69	704	488	-	-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은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4억 8천만원(시비 80%, 자부담 20%)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26년도에는 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편성되었음.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예산서〉

연 도	과목구분	내 역
2023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 세탁·건조 일체형, 건조 회수형 용제회수 시설 교체 지원 46,153,800원*13대*80% = 480,000천원
2024년		○ 드라이클리닝 용제회수시설 교체 지원 = 480,000천원 - 세탁·건조 일체형 50,000,000원*6대*80% = 240,000 - 건조 회수형 25,000,000원*12대*80% = 240,000
2025년		○ 친환경세탁기 설치 지원 40,000,000원*4대 = 160,000천원 ○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 16,000,000원*20대 = 320,000천원

동 사업 집행률은 2023년 100%, 2024년 98%, 2025년에도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진 실적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운영비 감소(21~53%), 만족도 우수(4.6~4.7점) 및 실내 공기질 개선(4.4~4.5점) 등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서울시의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에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과 低VOCs 도료·생활소비재 확대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바, 동 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³⁷⁾」(시행 '25.5.19.)가 개정된 만큼 동 사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7)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 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바. 자원순환과

- 2026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은 350억 6천8백만원으로 본부 총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105억 1천 1백만원)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58억 8천4백만원) 및 “SR센터 현대화”(36억 1천6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공공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반입량관리제 효율적 운영 - 환경부 및 3개 시도 등 기관 간 간담회 개최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시행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페널티 부과 	924	825	98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 홍보 -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보급 및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배포 - 종이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 분리배출 요일제 등 재활용 관련 홍보 	1,657	2,004	△347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중구, 영등포구 현대화 추진 - 지원대상 : 중구, 영등포구 - 지원규모 : 중구 (3,293백만원) 영등포구(7,218백만원) - 주요내용 : 광학선별기 도입, 선별라인 확장 등 	10,511	996	9,515
SR센터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센터 현대화 - 시설용량 증설 및 노후화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추진 - 시설규모 : 5,000톤/년 → 7,800톤/년 - 사업부지 :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3,616	754	2,862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균등발전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기 감량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및 확산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및 문화 조성 - 사업대상 : 배달음식, 장례식장, 축제 등 플라스틱 폐기물 다량 배출지 ※ '26년도 회계이관(일반회계 → 균특회계) 	5,884	4,562	1,322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는 재활용 분리배출과 재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20억 3백만원) 대비 17% 감소한 16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362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구축 및 홍보 80,000,000원 = 80,000천원	○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구축 및 홍보 6,000,000원*10회 = 60,000천원
	○ 종이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 사업 400,000원*2개소*12개월 = 9,600천원	○ 종이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 사업 400,000원*2개소*12개월 = 9,6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홍보 20,000,000원 = 20,0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홍보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위험성 평가 점검 및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용역 50,000,000원 = 50,000천원	○ 위험성 평가 점검 및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용역 50,000,000원 = 50,000천원
		○ 폐비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 100,000,000원*1회 = 100,000천원
	증감사유	
	- 비닐 분리배출 홍보비 반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보급 7,839,000매*180원/매 = 1,411,000천원	○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보급 7,166,000매*180원/매 = 1,290,000천원
	○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배포 610,000개소*1매*500원/매 = 305,000천원	
	증감사유	
	- 분리배출 홍보비는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여 시 직접 추진 예정	

다양한 폐기물 감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립 비율 역시 24%로 낮지 않은 수준³⁸⁾임.

38) 발생량(톤/일) : 2020년 3,111 → 2021년 3,069 → 2022년 3,052 → 2023년 3,079
2023년 처리량 : 3,079톤/일, 소각 2,352톤/일(76.4%), 매립 727톤/일(23.6%)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동 사업에는 폐비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 1억원과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 봉투 제작·보급에 1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많은 시민이 폐비닐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단순 안내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형·맞춤형 홍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비³⁹⁾, 사업비⁴⁰⁾ 및 용역비⁴¹⁾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용역비는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은 개인 컵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기를 감량하려는 것으로 전년(45억 6천2백만원) 대비 29% 증가한 58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배달음식(8억원), 도시락·축제(6억 3천만원), 장례식장(21억 9천5백만원), 경기장(3억원)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지원하는 것과 다회용컵(개인컵) 이용 지원(9억원) 및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3억원) 등이며, 특히 장례식장 다회용기 자체 세척장 구축 1억원과 자치구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에 5억 7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배달 음식 분야의 다회용기 보급은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산하는 것임.

자치구 배달앱 다회용기 보급은 2025년 20개 자치구로 확대, 주문 건수는 146,0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월평균 주문도 400건에서 14,60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임.

한강공원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25년 10월 기준) 역시 참여 매장은 158개소, 반납함은 5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문 건수는 216건에 그치고

39)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폐비닐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홍보

40) 종이 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 사업

41) 위험성 평가 점검과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용역

있어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 배달앱 다회용기 보급 현황〉

구 분		2021년 (10~12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기준)
자치구 수(개)		1	5	10	15	20
주문 수 (건)	연간	1,201	29,384	101,836	128,149	146,078
	월평균	400	2,449	8,486	10,679	14,608
가게 수 (개소)	누적	70	490	1,099	2,026	2,761
	제휴 유지	55	293	856	890	952

〈한강공원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

구 분	다회용기 주문 수(건)	다회용기 매장 수(개소)	반납함 설치 수(대)
합 계	216	158	5
여의도 한강공원	152	67	3
독섬 한강공원	64	91	2

사. 자원회수시설과

-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과 사업예산은 1,671억 3백만원으로 본부 총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1,120억 4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348억 8천5백만원)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20억 8천2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자원회수시설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인건비, 약품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 보수비	112,040	107,198	4,841
자원회수시설 설치	○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 설계 및 공사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주민소통협의회 운영 및 설명회 개최	(x500) 2,082	(x9,691) 54,772	(x△9,191) △52,690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 강남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노원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811	1,201	△390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은평, 구로)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 구로구 운영비 지원 1,046백만원 - 은평구 운영비 지원 4,225백만원	5,271	4,990	281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은평, 구로)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 은평구 사업비 지원 1,019백만원 - 구로구 사업비 지원 8,800백만원	9,819	6,897	2,92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10%) 전출 - 자원회수시설 공동주택 난방비 지원금(70%) 등 전출	34,885	32,660	2,225

-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친화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⁴²⁾ (1천톤/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년(547억 7천2백만원) 대비 96% 감소한 20억

42) 총사업비 : 8,338억원(자원회수시설 7,154억원, 주민편익시설 1,184억원 / 국비 30%)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 내역은 측량 및 주민편익시설 조사를 위한 시설비 6억4천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3억 6천5백만원, 감리비 10억 2천7백만원 등임.

동 사업은 2019년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래 입지결정 고시(2023년), 중앙투자 심사 통과(2024년)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2026년부터 시행 되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소송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공사발주 등이 일시 중지(집행률 0.5%)되어 건립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바, 항소심 판결선고('26.2. 예정)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공사발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건립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소송 진행 경과〉

○ 소송 진행 경과

- 2023.11. : 소장 접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77)
- 2024.6.~11. : 1~4차 변론 실시
- 2025.1.10. : 선고(입지결정고시 취소 판결)
- 2025.1.~2. : 항소장 제출 및 법원 사건 접수
- 2025.4.18. : 항소이유서 제출
- 2025.8.~11. : 1~3차 변론 속행

○ 판결 내용(서울행정법원)

- (판단) 원고가 주장한 32개 쟁점 사항에 대해, 법원은 3개 사항 인용
- (주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생활폐기물을 자체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자치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구로구에 10억 4천6백만원, 은평구에 42억 2천5백만원 등 총 52억 7천1백 만원을 편성하였음.

두 시설 모두 전년도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연간 운영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구로구에는 광명자원회수시설 운영비와 주민지원기금(구로구 부담금), 은평구에는 운영 적자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 방침⁴³⁾에 따른 것으로 지원 기한은 구로구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폐쇄 시까지, 은평구는 203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2024년 은평환경플랜트 시설 운영비는 102억 9천만원으로 서울시는 정산을 통해 운영 적자의 50%인 49억 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2024년 소각시설 운영비를 반입량 톤당 환산하면 약 63만원으로 소규모 시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영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 내역
2023년	- 구로구 구로구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비 지원 : 1,000 -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 지원 : 2,614
2024년	- 구로구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비 지원 : 643 -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 지원 : 3,833
2025년	- 구로구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비 지원 : 없음 -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 지원 : 4,990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은 구로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광명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은평환경플랜트 설비 노후화로 전면 대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구로구 88억원, 은평구 10억 1천9백만원 등 총 98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치구 자원회수시설의 건립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⁴⁴⁾에 따른 것으로 광명자원회수시설⁴⁵⁾의 경우 구로구 부담금의

43)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구로구 운영비 지원기간 연장계획(자원순환과-12685, '20.7.)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재정지원계획(자원순환과-112559, '21.9.6.)

44)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88%(기준부담율 70%+추가부담율 18%), 은평환경플랜트⁴⁶⁾는 사업비의 80%를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 중 은평환경플랜트는 가스화열 용융 방식을 적용한 소규모 시설(48톤/일)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의 혼합소각으로 인한 설비 부식과 내구연한(15~20년) 도래로 수리와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처리 방식 자체가 경제성이 매우 낮아 전면 대보수를 추진 중임.

대보수 추진 자체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기존과 같이 소규모 용량으로는 은평구의 일부 폐기물만을 처리할 수 있고 경제성도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용량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치지 않는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 공원·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7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시비보조율 80%(비선회수시설 10%p 가산 포함. 보조율 70%+ 가산 10%p)

45)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변경계획(자원회수시설과-3651, '25.3.31.)

: 적기 완공 필요성과 자체처리 기반 조성한 모범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25년 지원분부터 추가지원

46) 은평환경플랜트 시설 대보수 지원 계획(자원회수시설과-8944, '25.8.27.)

아. 생활환경과

- 2026년도 생활환경과 사업예산은 163억 9백만원으로 본부 총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2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13억 5천4백만원), “환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11억 9천2백만원) 등이 있음.

〈2026년 생활환경과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 산	증 감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	○ CNG 청소 차량 18대 전환 지원 - 경유 청소차의 단계적 저공해차(CNG) 전환 지원(시비 50% : 구비 50%) ※ '25년부터 국비 사업(도로재비산면지 저감) 지원대상에서 CNG 도로청소차 제외되어 '26년부터 시 자체사업 추진	2,700	-	2,700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명절격려품, 휴양소, 산업시찰, 안전교육 등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환경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용역 추진 - 청운복지회관 유지 및 시설개선 추진	1,192	1,046	14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보급 지원 -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구매(임대) 설치비 지원 (시비 35% : 구비 65%) ▶ RFID 종량기 : 1,600대 / 대형감량기 : 29대	1,354	2,000	△646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 버스정류소, 도로변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가로쓰레기통 474개 보급 ▶ 일반 : 250천원×300개 / 서울형 : 1,200천원×100개 ▶ 버스정류소 노후 쓰레기통 교체 : 500천원×74개	262	504	△242

-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은 도로 재비산면지 저감과 연계한 경유 등 청소 차량의 단계적 저공해 전환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청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는 27억원(시비 50%, 구비 50%)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사업별설명서 p.465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CNG 도로청소차량 전환 지원 150,000,000원*18대 = 2,700,000천원
	증감사유	
	- 경유차 등 도로청소차의 단계적 저공해차량 전환을 위한 CNG 도로청소차 보급(시 구비 50:50) : 대상차종 :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CNG 18대) - 2014~2024년 CNG 도로청소차 211대 보급 지원	

동 사업은 경유 청소 차량 구매 억제를 위해 CNG 청소 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⁴⁷⁾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2023년부터 전기, 수소, CNG 연료를 사용하는 도로 청소 차량에 대해 국비(국비 50%, 시비 50%)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CNG 차량이 제외⁴⁸⁾된 관계로 자치구는 구매 가격 차이로 인해 경유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⁴⁹⁾이 있음.

또한, 최근 수소 청소 차량이 판매되고 있지만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 자치구가 구매를 꺼리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바, 생활환경과와 친환경차량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소 청소 차량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서울시 자치구(직영)의 도로 청소차 총 450대 중 저공해차량 전환 대상(내구연한 8년 이상) 84대이나, 여러 여건(전기 청소차량 미개발, 수소충전소 부족)상 친환경 청소 차량의 보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직영 도로 청소 차량 현황〉

(단위:대)

구 분	총 계	경유	CNG	전기	수소
총 계	450	172	230	45	3
8년 미만	366(81.3%)	94	225	44	3
8년 이상	84(18.7%)	78	5	1	-

47) 2026년 저공해 청소차량 전환지원 계획(생활환경과-12104, '25.8.13.)

4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원대상 : 2024년 CNG, 전기, 수소(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 청소차 → 2025년 전기, 수소(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 청소차

49) 경유 차량과 CNG 차량의 가격 차이 : 약 1억 4천만원

〈최근 3년간 도로 청소 차량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대)

구 분	총 계	CNG	전기	수소	총 액
합 계	59	42	13	4 (‘22년 3대 이월)	18,622
2023년	23	15	5	3	8,025
2024년	31	26	5 (‘23년 1대 이월)	-	8,799
2025년	5	1 (‘24년 1대 이월)	3	1	1,798

-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관한 조례」⁵⁰⁾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해 소형감량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는 8억 7천 5백만원(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60%)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음.

동 사업은 9월 말 기준, 가정용 소형감량기 8,132대 보급과 함께 연말까지 목표를 100%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이 우수하지만 20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담당 부서(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의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서울시 가정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1,809톤(‘24년) 중 대부분 (65%)을 서울 외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점과 함께 소형 감량기가 폐기물 발생원 감량에 최적화된 기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동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50)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발생원 감량) ① 구청장은 개별 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등을 설치한 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신규사업 검토의견

- 2026년도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지원” 등 4건으로 23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합 계		2,383
일 회 반 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원(국비)	635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 강화(국비)	300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738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711

-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은 목동 플랜트와 양천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방안을 위한 기본구상⁵¹⁾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설비 7억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목동 플랜트와 양천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타당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1안, 2안)를 도출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9월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⁵²⁾임.

목동 플랜트(1987년 준공)와 양천자원회수시설(1996년 준공)은 운영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52) 목동·양천시설 통합배치 및 현대화 전략구상 용역 추진계획(녹색에너지과-22923, '25.9.24.)

상황이며, 더불어 목동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2028년~2037년)되어 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이견 없음.

〈2026년도 예산안 산출근거〉_사업별설명서 p.205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시설비		○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 737,960천원
		-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증감사유	
	- 열·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신규 추진	

〈목동플랜트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현황〉

구 분	목동플랜트	양천자원회수시설
위 치	양천구 목동 900	양천구 목동 900-21
면 적	53,344.3m ²	16,914.1m ²
시설규모	CHP 2기, PLB 7기 (전력 24MW, 열 524Gcal/h)	400톤/일
준공연도	1987.12.	1996.3.

〈열·환경 플랜트 관련 추진 일정(안)〉

- 추진 일정
 - 2026년: 계획 구체화 및 시나리오(1안, 2안) 마련 용역
 - 2027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7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28년: 타당성 조사
 - 2029년: 투자심사
 - 2030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031년~: 착공

-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은 장기간 폭염이 반복됨에 따라 폭염 피해 완화 및 냉방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거주 요양시설에 차열 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에 7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건물 지붕에 태양열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시공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⁵³⁾ 것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사업을 통해 경로당 224개소, 어린이집 195개소, 주민센터 31개소, 문화·복지·체육 센터 28개소, 기타 20개소 등 총 498개소에 차열페인트 도장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도 77개소⁵⁴⁾에 지원 중에 있음.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위기 취약 계층 지역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유의해야 할 것임.

〈2019년~2024년 쿨루프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	자치구	추진 실적	예산	국비	시비	구비
소 계			498개소	5,518	1,188	2,935	1,395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2019년	19개구	· 113개소 (경로당 83, 어린이집 30)	548	-	548	-
	2020년	11개구	· 113개소 (경로당 62, 어린이집 51)	695	-	695	-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2021년	18개구	· 103개소 (경로당 26, 어린이집 13, 문화시설 23, 체육시설 3, 주민센터 30, 빗물펌프장 8)	1,900	-	1,100	800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2020년	1개구	· 47개소 (경로당 37, 어린이집 9, 청소년회관 1)	240	120	-	120
	2021년	3개구	· 21개소 (어린이집 21)	162	81	49	32
	2023년	3개구	· 16개소 (어린이집 6, 경로당 8, 주민센터 1, 자치회관 1)	670	335	189	146
	2024년	4개구	· 14개소 (어린이집 1, 경로당 2, 복지센터 1, 체육센터 1, 노인복지관 3, 주택 6)	188	94	49	45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21년	7개구	· 34개소 (어린이집 34)	336	168	87	81
	2022년	4개구	· 10개소 (어린이집 10)	162	81	45	36
	2023년	7개구	· 16개소 (어린이집 16)	310	155	87	68
	2024년	10개구	· 11개소 (어린이집 4, 경로당 6, 도서관 1)	307	154	86	67

5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대응시설 설치 및 관리(쿨루프) 가이드(환경부, '24.5.)

54) 기후환경본부: 공공건축물 차열페인트 도장 9개소, 기후위기 취약계층 31개소
재난안전실: 자치구 폭염저감시설 지원 37개소

6. 성인지예산 검토의견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사업과 성별 영향평가사업 등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일부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있음.

〈2026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 산	증감액	비 고
소 계	3,196	3,776	△58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1,826	1,792	35	기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70	1,370	-	기타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	615	△615	2026년 제외

-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2건에 31억 9천6백 만원을 편성하였음.
-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⁵⁵⁾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 관념 홍보물 제작·홍보, 가족 단위 참여에 따른 성비 불균형, 환경·화공계열 전공자의 성비 불균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 원인이며, 위 2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임.

성인지 예산서가 사업별로 특화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의 근본적인 목표인 성평등 증진보다는 단순히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식적인 목표에 그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55)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p.432~440(서울특별시)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 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성인지 사업의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인지예산서 p.432~440

구 분	성별 격차 원인	비 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p>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남성이 많으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주양육자 비율이 여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센터 방문자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여성이 많음. '25.7월 성인 기준 프로그램 참여율은 여성 52%, 남성 48%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대상자인 서울시민의 성비와는 유사한 수준임. 다만, 가족 단위나 어린이 프로그램의 성인 남성 참여율을 높여, 성평등한 돌봄 참여를 독려가 필요함.</p> <p>남성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책환경에서 발생하는 성 불평등이나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수혜격차 등에 기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가족(혹은 영유아·아동과 보호자 동반) 프로그램의 성별 참여 현황을 작성할 필요성 있음.</p>	계속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p>환경 화공분야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업의 특성상, 성별 전공 분리 및 직종분리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매년 여성에 비해 남성 지원자 수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 성비의 격차가 발생함.</p> <p>최종 합격은 공개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 지원자 비율의 확대가 필요한바,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p>	